

저성장과 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

제2차 토론회

한국경제 저성장 장기추세의 원인과 대책

17. 8. 29 (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발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 이승만학당 교장

／ **토론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저성장 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 제2차 토론회

“한국경제 저성장 장기추세의 원인과 대책”

□ 취지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서민중심경제’는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을 배격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기초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떨어진 소외된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분배’와 ‘성장’ 양 측면에서 저성장을 극복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두 번에 걸쳐 개최한다.

□ 개요

- 주 제: 「한국경제 저성장 장기추세의 원인과 대책」
- 일 시: 2017년 8월 29일(화), 14:00 ~ 16: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 참 여: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 이승만학당 교장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3:30~14:00(30')	등 록
14:00~14:30(30')	【인사말】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o 사회: 윤창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 (서울시립대 교수)
14:30~15:10(40')	【발제】 「한국경제 저성장 장기추세의 원인과 대책」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이승만학당 교장
15:10~15:30(20')	【토론 1】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15:30~15:50(20')	【토론 2】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15:50~16:10(20')	종합토론

□ 목차

【발 제】 「한국경제 저성장 장기추세의 원인과 대책」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이승만학당 교장 _____ 7

【토론 1】 「저성장의 원인과 대책」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_____ 25

【토론 2】 「약자를 어떻게 자조, 자강하게 할 것인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_____ 41

발 제

한국경제 저성장 장기추세의 원인과 대책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 이승만학당 교장

【발제문】

한국경제 저성장 장기추세의 원인과 대책

이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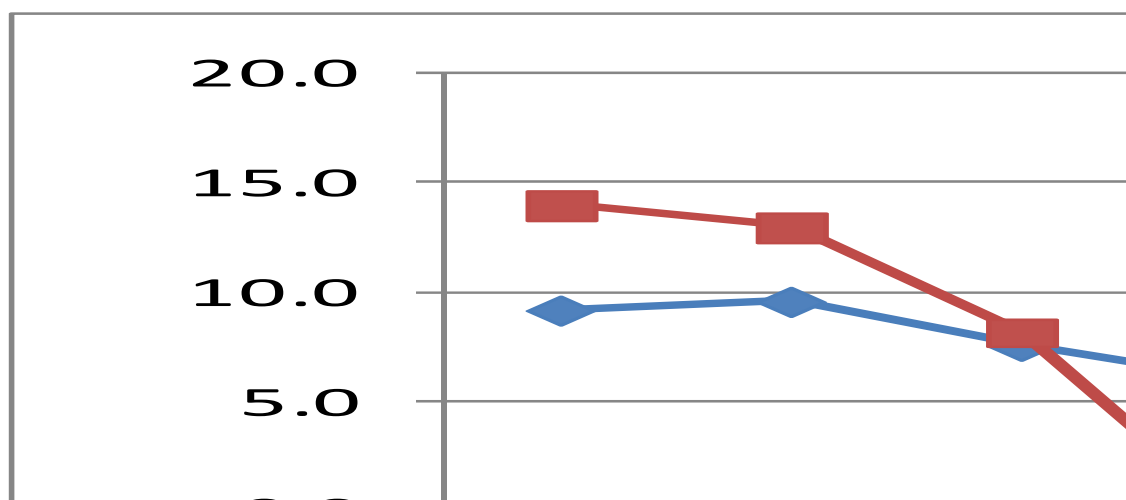
전 서울대 교수

이승만학당 교장

명제1: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은 대기업 주도의 수출공업이다.

한국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1999~2000년의 10.1%를 고점으로 하여 2013~2014년의 3.1%로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투자의 부진이 그 주요 원인이다. 투자증가율은 1994~1995년의 13.5%에서 2013~2014년의 3.2%로 낮아졌다. 감속추세나마 성장을 이끈 동력은 수출이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의 비중은 1994~1995년의 26%에서 2013~2014년의 54%로 높아졌다. 국민총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대외의존도)은 동기간 53%에서 103%로까지 증가하였다 (<자료1>).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이례적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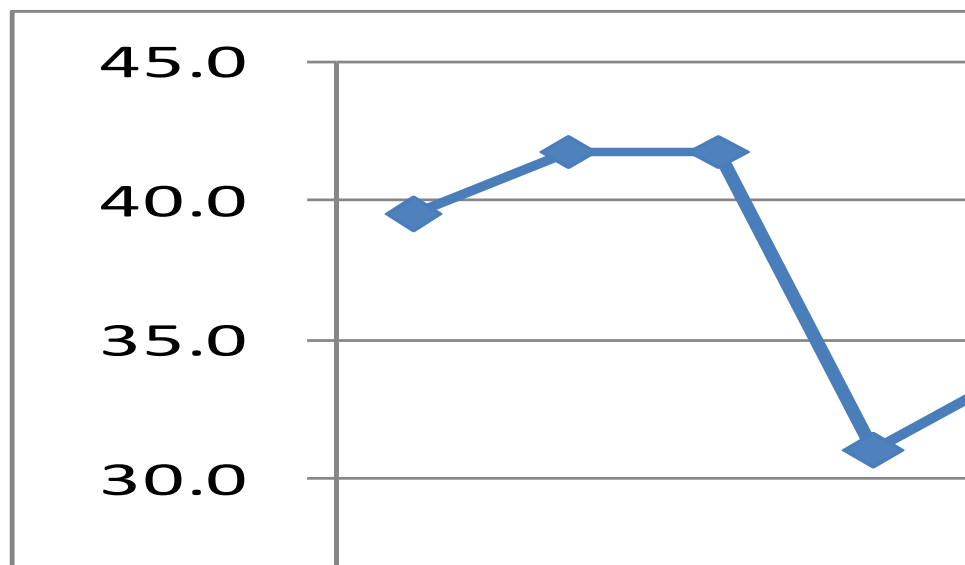
【자료 1】 GDP 성장률, 투자증가율, 대외의존도의 추이(1994~2014)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비고: 左軸은 성장률과 투자증가율, 右軸은 대외의존도이다.

수출의 주력 제품은 2014년의 경우 전기제품(24%), 자동차(13%), 기계·컴퓨터(11%), 석유석탄(9%), 선박(7%), 광학기기(6%), 플라스틱(6%) 등이다. 수출의 주력 부대는 이들 중화학공업에 종사하는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1995~1996년의 41%에서 2013년의 17%로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자료 2>). 그 대신 대기업의 수출 비중이 급하게 늘어 2013년에 83%나 되었다.

【자료 2】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1995~2013)



출처: 1995~2008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수출통계」.
 2009~2012년: 중소기업중앙회, 『2013년 중소기업위상지표』.
 2013년: 『전자신문』 2014년 10월 12일.

명제2: 한국의 수출공업은 첨단조립가공업이다.

1960년대 이래 한국의 수출공업은 국내외 시장 및 기술 조건에 규정되어 조립가공업으로 영위되어 왔다. 초기의 조립가공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점차 노동집약적 중화학공업, 자본·기술집약적 중화학공업으로 이행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기술수명이 짧은 몇 개의 신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선발국의 경쟁기업을 추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원천 기술의 결여와 그것을 대체하는 비교지경학적 우위(comparative advantage of geo-economics)로 인해 여전히 조립가공의 특질을 보지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총수입에서 수출용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이래 40% 전후에서 감소하지 않고 있다.

2013년 산업연관표 상의 수입투입계수와 수출입 무역통계를 대조하면, 주요 수출품과 동종 공업의 수입품 수요가 상당 부분 수출공업 자체에서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반도체의 수입계수는 0.393인데, 그중 0.182는 국내 동종 반도체공업의 수요에 기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 수입 반도체의 46%가 국내 반도체공업의 중간재로 투입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철강 수입의 43%, 플라스틱 수입의 34%, 일반목적용기계 수입의 56%, 특수목적기계 수입의 27%, 전기장비 수입의 40%,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입의 32%, 정밀기기 수입의 44%가 동종 산업의 중간재 수요로 수입되고 있다.

<자료3>은 2013년의 10대 수출품의 수출액과 동종 공업의 대일본 수입액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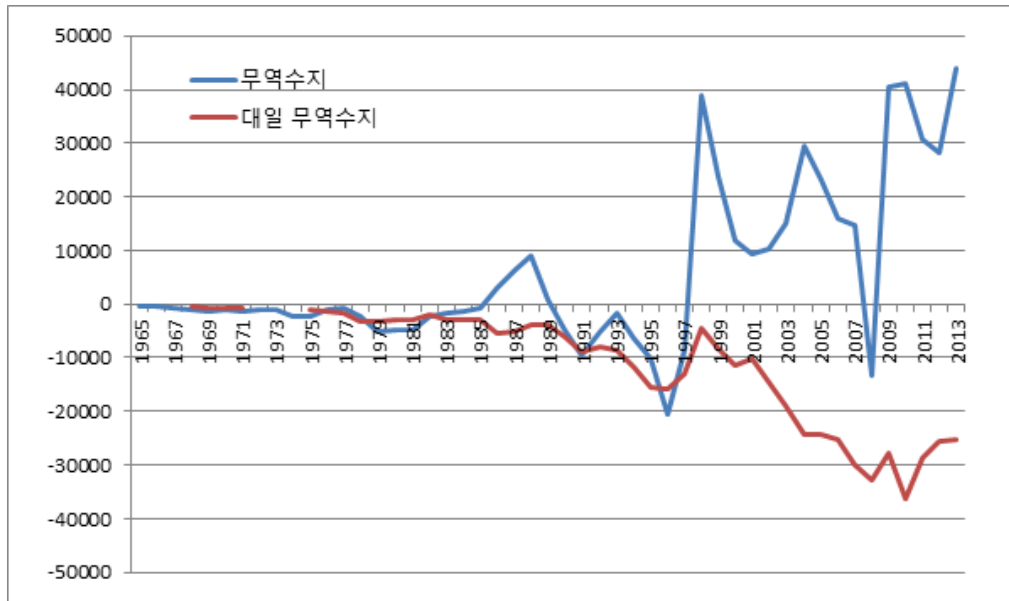
【자료 3】 2013년 주요 수출품과 주요 대일 수입품(천 달러)

분류	수출액(A)	대일 수입액(B)	수입순위	B/A(%)
전기제품	135,497,123	9,789,938	2	7.2
자동차	72,771,813	1,497,208	9	2.1
기계·컴퓨터	59,318,363	10,190,716	1	17.2
석유·석탄	54,112,787	3,395,019	7	6.3
광학기기	35,943,226	4,258,202	5	11.8
선박	35,869,754			
플라스틱	31,172,468	4,247,786	6	13.6
유기화합물	24,856,006	5,020,685	4	20.2
철강	22,269,931	7,906,163	3	35.5
철강제품	11,179,899	1,202,126	11	10.8

출처: 관세청, 「무역통계」.

선박 1종을 제외한다면, 한국의 수출공업은 여전히 고급 중간재, 기계, 장치를 일본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국내외 산업연관은 무역수지에 잘 반영되고 있다. 1998년 이후 한국경제는 연간 300억 달러 전후의 흑자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은 연간 200억 달러 전후의 대일본 적자를 전제한 것이다(<자료 4>).

【자료 4】 무역수지와 대일 무역수지(1965~2013, 100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통계시스템」.

오늘날 한국경제는 부가가치의 국제적 흐름에서 일본과 미국 등의 상류로부터 고급 중간재를 수입하여 첨단 조립·가공한 제품을 중국·동남아·인도·동유럽 등의 하류에 수출하는 중류에 위치해 있다(<자료5>). 한국경제의 수출부가가치율이 OECD제국에서 맨 하위 그룹에 속함도 그 같은 국제적 지위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자료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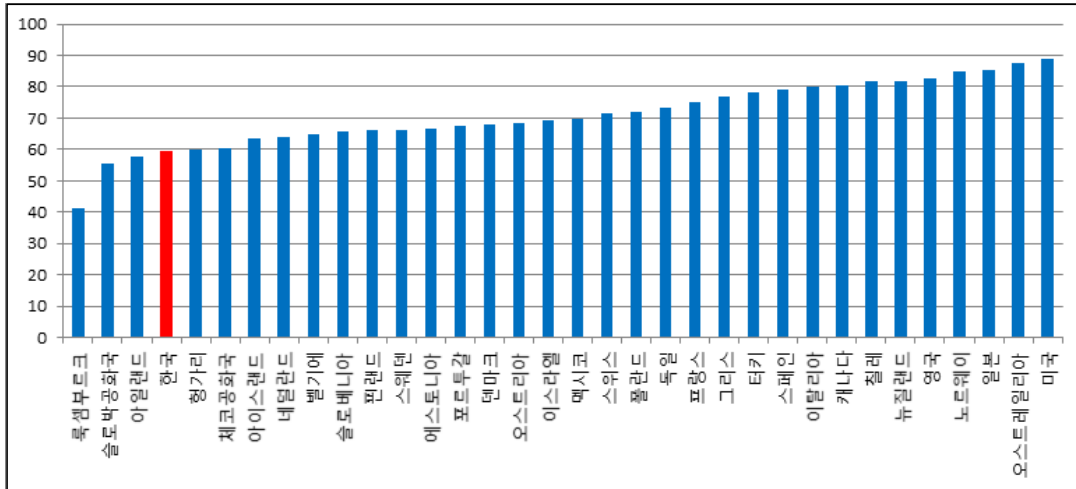
【자료 5】 지역간 수출의 전방 및 후방 연관(2009, 단위: 10억 달러, %)

	수출액	전후방 연관	Korea	US	Japan	China	ASEAN+2	EU-15	EU-추가	RoW	합계
Korea	401.2	전방 연관		1.3	1.0	9.4	5.0	2.9	1.3	2.7	23.7
		후방 연관		4.6	5.1	4.8	5.2	4.8	0.4	15.7	40.6
US	1,458.2	전방 연관	1.3		0.9	3.2	4.1	10.2	0.8	6.9	27.4
		후방 연관	0.3		0.9	0.9	0.8	2.4	0.1	5.8	11.3
Japan	618.0	전방 연관	3.3	2.1		9.1	7.9	5.2	1.2	3.3	32.2
		후방 연관	0.6	2.2		1.7	2.3	2.0	0.2	5.8	14.8
China	1,284.0	전방 연관	1.5	1.0	0.8		3.4	3.3	0.7	2.0	12.8
		후방 연관	2.9	3.6	4.4		6.1	4.9	0.4	10.3	32.6
ASEAN+2	1,139.2	전방 연관	1.8	1.0	1.3	6.8	5.7	4.0	0.8	2.6	24.0
		후방 연관	1.8	5.2	4.3	3.9	5.7	5.5	0.4	10.0	36.7
EU-15	4,697.4	전방 연관	0.4	0.7	0.3	1.3	1.3	12.4	1.9	2.8	21.2
		후방 연관	0.2	3.2	0.7	0.9	1.0	12.4	1.4	7.5	27.3
EU-추가	569.3	전방 연관	0.3	0.4	0.2	1.0	0.8	11.6	3.3	1.8	19.3
		후방 연관	0.9	2.1	1.3	1.7	1.6	15.3	3.3	8.1	34.4
RoW	2,584.3	전방 연관	2.4	3.3	1.4	5.1	4.4	13.7	1.8	2.8	34.9
		후방 연관	0.4	3.9	0.8	1.0	1.1	5.0	0.4	2.8	15.5

주) 전방 연관은 수출액 중에서 다른 나라의 수출품 생산에서 중간재로 사용되는 비율을, 후방 연관은 자국의 수출액 중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조달된 중간재의 비율을 말한다.

출처) 김낙년(2015), 「세계와 한국의 무역 동향, 1948~2013」, 68쪽.

【자료 6】 수출부가치율의 국제비교(2009년 기준)



출처: OECD.Stat.

명제3: 지난 20년간 새로운 형태의 이중구조가 생겨났다.

1993~2012년 전 산업에 걸쳐 사업체 총수는 230만에서 360만으로, 종사자 총수는 1,224만에서 1,856만으로 증가하였다. 종사자 규모별 동향을 보면 300명 이상 대기업을 정체 내지 감소한 반면, 50명 이하의 영세 사업체가 크게 증가하였다(<자료7>).

【자료 7】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별 분포(1993,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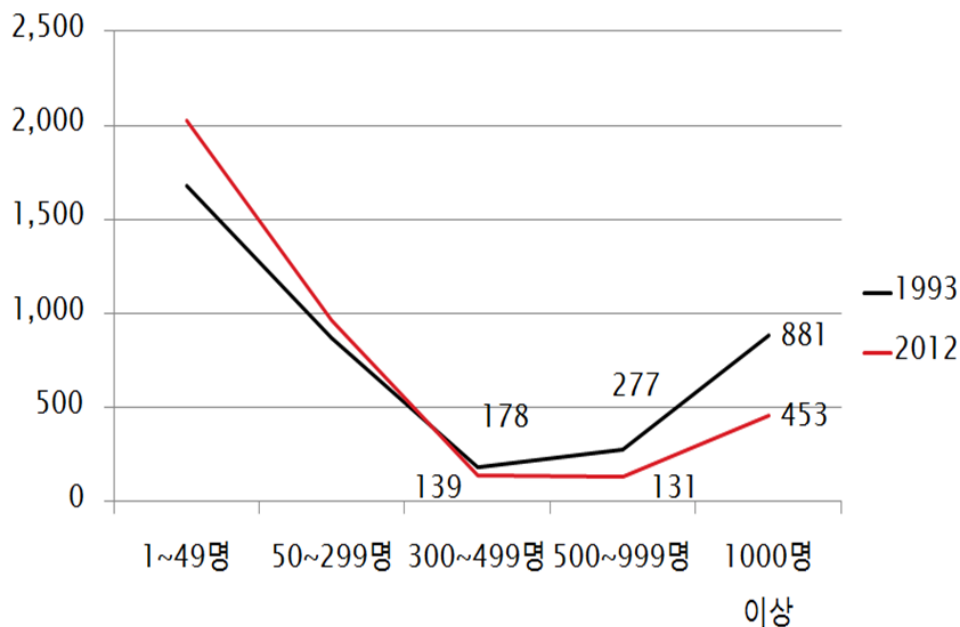
단위: 개, 명, %

종사자 규모별	전 산업				제조업			
	1993년		2012년		1993년		2012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계	2,304,250 (100.00)	12,245,073 (100.00)	3,602,476 (100.00)	18,569,355 (100.00)	281,590 (100.00)	3,884,496 (100.00)	360,394 (100.00)	3,715,162 (100.00)
1 - 9명	2,148,392 (93.24)	4,777,779 (39.02)	3,329,636 (92.43)	7,639,701 (41.14)	226,603 (80.47)	722,800 (18.61)	296,483 (82.27)	921,091 (24.79)
10 - 49명	129,795 (5.63)	2,652,472 (21.66)	229,346 (6.37)	4,446,073 (23.94)	45,084 (16.01)	956,925 (24.63)	53,790 (14.93)	1,108,169 (29.83)
50 - 299명	23,257 (1.01)	2,247,522 (18.35)	40,151 (1.11)	3,895,021 (20.98)	8,680 (3.08)	867,469 (22.33)	9,434 (2.62)	961,325 (25.88)
300 - 999명	2,201 (0.10)	1,048,343 (8.56)	2,800 (0.08)	1,381,787 (7.44)	924 (0.33)	456,131 (11.74)	566 (0.16)	271,480 (7.31)
1,000명 이상	605 (0.03)	1,518,957 (12.40)	543 (0.02)	1,206,773 (6.50)	299 (0.11)	881,171 (22.68)	121 (0.03)	453,097 (12.20)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한국경제의 국제 경쟁력은 제조업에 있으며, 아직 탈공업화의 시대에 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제조업에서 대기업의 감소 추세는 다른 어느 산업에서보다 두드러졌다. 예컨대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의 수는 동기간 1,223개에서 687개로 감소하였다. 종사자 수도 133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감소하였다(<자료8>). 국제 경쟁력을 구비한 대기업이 쇠퇴하고, 국제경쟁력을 결여한 영세 사업체가 무수히 족생하여 좁은 국내시장에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음이 오늘날 저성장 추세에 놓인 한국경제의 민낯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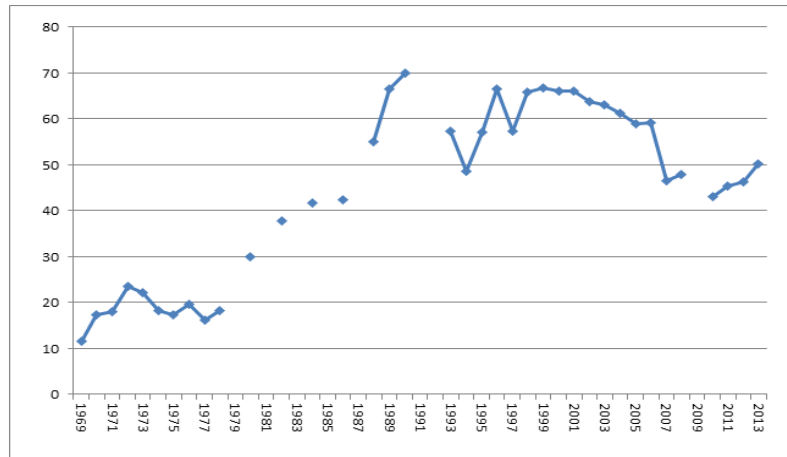
【자료 8】 제조업 대기업 종사자의 급감(1993, 2012)



출처: 조우현·황수경(2016), 『새로운 노동경제학』, 법문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품, 소재, 기술 연관도 점점 낮아졌다. 그것을 대변하는 수급업체 비율은 1999년의 66.9%를 정점으로 하여 2013년 50.3%로 낮아졌다(<자료9>).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각종 연관이 약화되어 왔음은 산업연관표에서 1995년 이후 수입중간재투입계수가 증가해 온 추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자료10>). 중간재 총 투입에서 수입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18.8%를 최저점으로 하여 2013년의 25.1%로까지 높아졌다(<자료11>).

【자료 9】 제조업 수급업체의 비율(1969~2013)



출처: 상공부,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 연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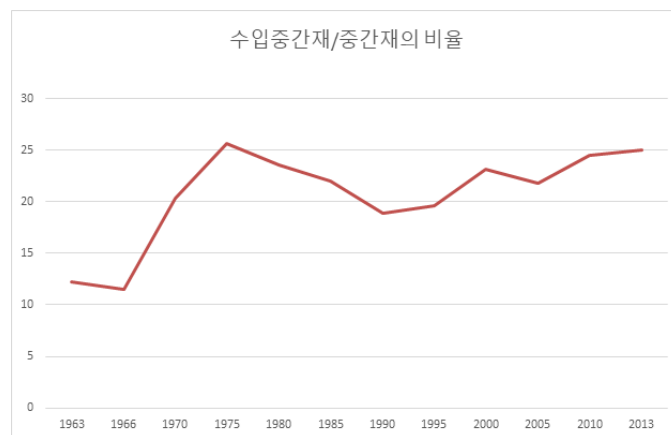
【자료 10】 중간재 투입계수(국산, 수입)의 추이

연도	투입계수	국산투입계수	수입투입계수	부가가치	비경쟁수입
1963	0.3855	0.3385	0.0470	0.5783	0.0361
1966	0.3750	0.3320	0.0430	0.5705	0.0406
1970	0.4573	0.3642	0.0931	0.5427	
1975	0.5368	0.3994	0.1375	0.4632	
1980	0.6036	0.4612	0.1424	0.3964	
1985	0.5865	0.4575	0.1290	0.4135	
1990	0.5723	0.4645	0.1078	0.4277	
1995	0.5534	0.4447	0.1087	0.4466	
2000	0.5667	0.4355	0.1312	0.4333	
2005	0.5882	0.4601	0.1281	0.4118	
2010	0.6163	0.4669	0.1511	0.3837	
2013	0.6379	0.4676	0.1599	0.3621	

출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연도.

비고: 1963, 1966년의 비경쟁수입은 원조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자료 11】 중간재 투입에서 수입중간재 투입의 비율(1963~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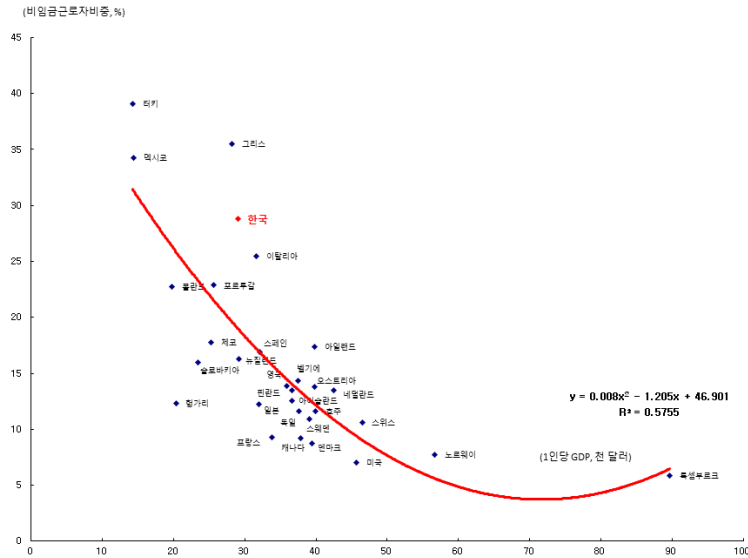
출처: <자료10>

오늘날 한국경제는 성장을 주도하는 대기업 주도의 수출공업과 중소기업 주도의 내수공업 간의 각종 연관이 약화되는 신중 이중구조의 병폐에 시달리고 있다. 그것이 생겨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부터인데,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짐작된다. 하나는 당시 한국경제를 감리한 IMF의 압력으로 이전 20년간 추진되어 온 수입다변화정책이 포기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 간 수급관계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심화됨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관계 체결을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3년 한국경제의 자립도는 1970년대 초반 수준으로 후퇴해 있다.

명제4: 구 중산층의 자본제적 분해가 중단된 가운데 영세 자영업이 팽배해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감속 저성장의 추세가 장기화함과 보조를 맞추어 사회계층의 구조가 왜곡되기 시작하였다. 앞서 소개한대로 종사자 1~9명의 영세 사업체의 수적 비중은 92.5%, 종사자 비중은 41.1%인데, 이는 국제적 비교에서 과도한 수준이다. <자료12>는 서비스업에서 보통 자영업자로 불리는, 종사자 1~9명의 영세사업체에 속하는 근로자의 비중을 1인당 GDP를 기준으로 국제 비교한 것이다. 한국은 28.8%로서 7.0%의 미국, 11.6%의 독일 등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물론, OECD제국의 평균 15.9%보다 월등히 높다. 한국은 39.1%의 터키, 35.5%의 그리스, 34.3%의 멕시코와 더불어 자영업이 두드러지게 비대한 국가군을 형성하고 있다.

【자료 12】 1인당 GDP 대비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 국제비교



출처: 김창욱·김정근(2014), 「한국 자영업 부문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

자영업의 절반 이상은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 등의 전통 서비스업이다. 사회계층에서 구 중산층에 속하는 이들 전통 서비스업은 고도성장기에 걸쳐 자본-임노동관계로 충분히 분해되지 않았으며, 양적으로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워낙 급하였을 뿐 아니라, 2000년대 이후 감속성장의 추세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조기적으로 퇴출된 자들이 이들 계층에 누적적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도시부에서 과밀하게 적체된 영세 자영업자는 상호간에 비생산적인 경쟁에 빠져 있으며, 그 결과 낮은 이익률, 높은 부채율, 낮은 생존율의 병폐를 드러내고 있다.

명제5: 노동시장 역시 이중구조로 분절되어 있다.

산업 및 기업 연관의 약화, 신중 이중구조의 형성, 영세 사업체의 팽배는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고용 실정과 동전의 앞뒤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2009년 종업원의 근속연수는 정규직의 경우 평균 6.2년으로서 OECD제국 가운데 가장 짧다. 비정규직이나 기간제의 근속연수는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나아가 전체 피용자 가운데 1년 미만 근속자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으로서 OECD제국에서 단연 최고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25.7%, 성별 임금 격차는 평균 39%로서 둘 다 OECD제국에서 최고이다.

노동시장의 실태가 열악한 것은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영세사업체가 과밀하게 적체하고 있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바로 거기가 비정규직과 저임금의 온상이다. 2011년 종업원 1~4명의 사업체에서 82.5%의 종업원이, 5~9명 사업체에서는 63.0%의 종업원이 비정규직이다. 반면 3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 비정규직은 16.5%에 지나지 않는다. 대기업과 영세사업체는 임금 수준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9년 대기업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종업원 30~99명은 51.2, 10~29명은 48.7, 5~9명은 46.0에 불과하다. 임금 수준의 커다란 격차는 노동생산성에서 커다란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 노동시장은 고용의 질, 임금, 생산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커다란 격차로 이루어진 분절성 내지 이중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대기업의 노동자는 고임금의 정규직으로서 잘 조직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고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노동자는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서 조직되어 있지 않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1989년의 19.8%를 정점으로 한 뒤 2005년 10.3%로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동기간 종업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유인과 능력이 있는 대기업이 정채 내지 후퇴하고 그렇지 못한 영세 소기업이 팽창해온 것의 당연한 결과이다.

대기업의 노동자는 1987년 이후 민주화시대가 제공한 여러 가지 권리를 그들만의 특권을 위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데 활용하였다. 기업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개별 기업의 단위로 이루어진다. 상위 단체인 산업별 노동조합이 있지만, 산업별 연대교섭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대기업 노동조합이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노동조합과 연대할 경우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과도 연대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정규직, 고학력, 고임금 노동자의 기득권을 고수하는 조직으로 변질해 있다(<자료13>). 그들은 노동자 계급이라기보다 촘촘히 짜인 계층·신분의 사회적 위계에서 보다 높은 지위로 상향하기 위한 생애목표와 행동원리로 잘 훈련된 전통시대의 향반(鄕班, 신흥양반)과 같은 집단이다.

【자료 13】 정규직과 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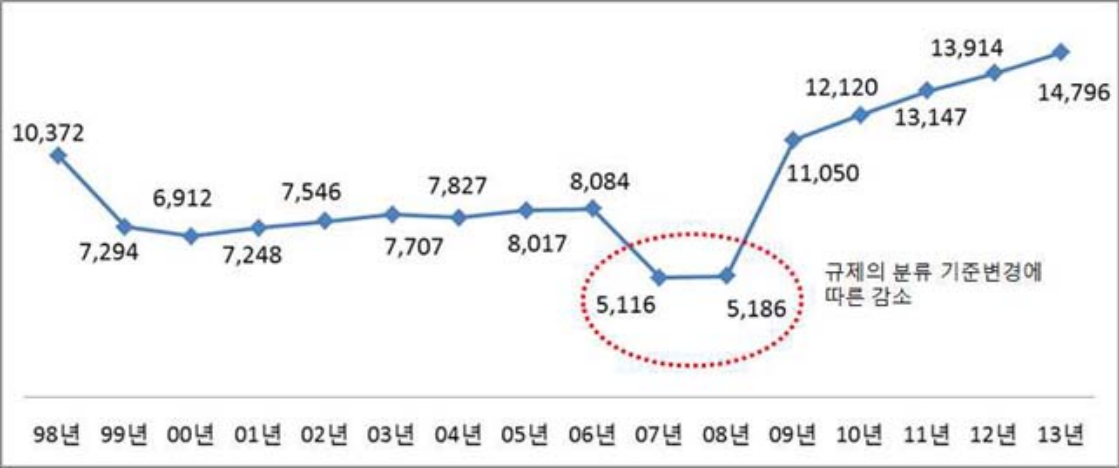
사업주와 종업원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협력 또는 일상적 갈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종업원의 임금체계는 근속연수에 기초한 연공형으로써 호봉제와 상여금의 형태로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 숙련의 축적과 그에 대한 평가는 종업원의 반발을 부르며, 사업주도 종업원의 숙련 형성을 기대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숙련을 기업 바깥에서 구하는 외부노동시장이다. 미국의 노동시장도 단기근속과 비조직성의 외부노동시장이다. 이 같은 형식적 유사성에 주목하여 한국의 노동시장을 미국형의 자유노동시장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잘 통합되어 있으며, 한국의 영세사업체와 같은 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온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명제6: 감속·저성장의 장기추세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업 규제 때문이다.

정부의 기업 규제 건수는 2000년의 6,912건에서 2013년의 14796건으로 증가하였다(<자료14>). OECD의 보고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경제는 상품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도에 있어서 ‘가장 억압적’인 그룹에 속하고 있다(<자료15>). 점점 심해지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상승할 하등의 유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증대하는 시장수요에 기업의 분할이나 공장의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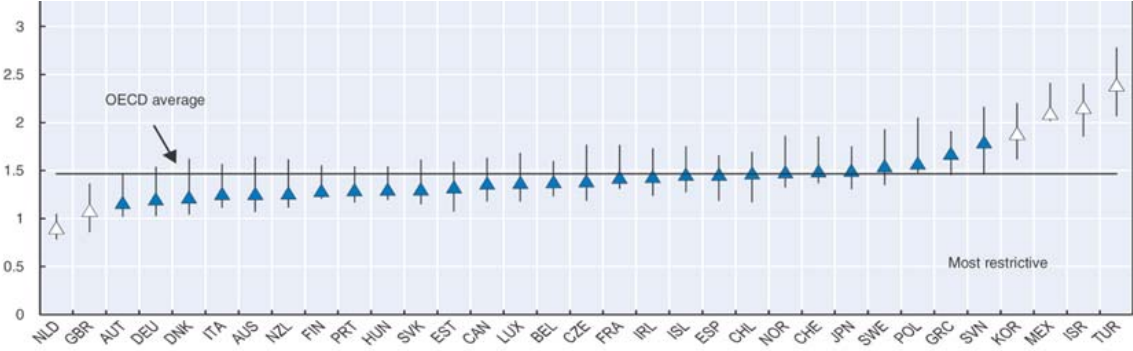
이전으로 대응하고 있다.

【자료 14】 정부의 기업 규제 건수 (1998~2013)



출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15】 상품시장 규제 정도의 국제 비교(2009)



출처: OECD.

민주화시대 이래 정부의 정책은 사회·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독과점업체로 지정된 대기업 내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억압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가운데 국가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인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억압은 저성장의 장기추세와 그에 따른 각종 악성의 양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시종일관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지만 국제경쟁력을 결여한 영세사업체만 양산하였다. 정

부의 규제는 산업·기업연관의 약화에 따른 신종 이중구조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원천 기술이나 암묵적 숙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1인 지배의 기업이며, 그러한 지배구조에 규정되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주와 종업원 간 내지 동종 업체 간의 협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한 협력의 전통은 한국경제사에서 일천하기 짝이 없다. 그런 기업군을 대상으로 사후 실적을 평가의 기준으로 하지 않은 퍼주기식 지원은 대부분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사기나 도덕해이로 흐르기 마련이었다.

명제7: 정부의 경제정책은 체계성, 보완성, 일관성을 상실하였다.

고도성장기 정부의 경제정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구비한 대규모 공장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건설하고, 그 적하효과로서 중소기업과 농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정보·기술·자본의 축적에 따라 국가경제의 구조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감을 기본원리와 목적으로 삼았다. 교육을 포함한 제반 사회정책도 이 같은 경제정책과 조응하였다. 정부의 제반 정책은 체계성, 보완성, 일관성의 미덕을 과시하였다.

민주화시대가 열림에 따라, 특히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고도성장기의 미덕이 하나씩 부정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김영삼정부가 성급하게 고도성장체제를 해체함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였다. 이후의 여러 정부에서도 경제정책의 비체계성, 상호 어긋남, 잠정성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경제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기조를 달리하였다. 심지어는 같은 정당이 정권을 이어도 그 점은 마찬가지였다.

정부의 제반 정책이 장기비전 하에서 체계성과 상호 보완성으로 짜이지 못한 대표적인 예를 경제정책과 교육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고도성장기의 박정희·전두환정부는 교육평준화 정책을 취하여 범용적 교양과 기술의 대학졸업생을 양산하였다. 고도성장에 따라 대량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대기업의 인력 수요가 노동집약적 조립가공에 머무는 한, 그 같은 교육정책은 합리적이었다. 고도성장의 추세가 멈추고, 대기업의 인력 수요가 자본·기술집약적 조립가공으로 이동함에 이르러 교육정책은 산업특수적 내지 기업특수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마땅하였다.

그럼에도 지난 20년간 교육평준화 정책은 민주화의 이름으로 그 기조를 유지하

였다. 그 결과 2008년의 대학 진학률은 83.8%에 달하기도 하였다. 그 사이 제조업, 특히 중소 제조업으로의 생산적 노동인구는 거의 공급되지 않았다. 2013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생산직의 평균 연령은 남성 46.3세, 여성 52.1세이다. 생산직 인구의 고령화는 생산성의 하락을 불러오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강요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이 제조업의 인력부족과 청년실업이라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은 오로지 정부의 제반 정책이 장기적 기획을 결여한 가운데 부문별로 심하게 어긋나는 정책 실패에 따른 비용에 다름 아니다.

명제8: 전면적인 자유화와 개방을 통한 대기업 주도의 세계경영이야말로 국가경제를 선진화시키고 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진정한 서민경제의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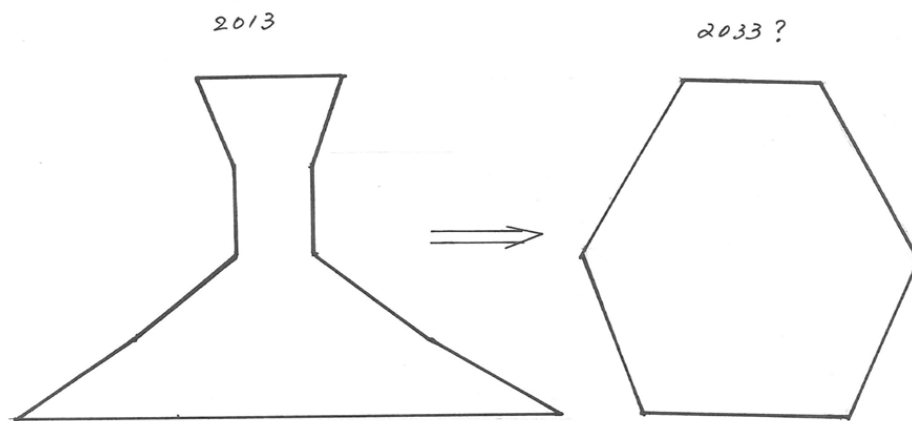
한 세대에 걸친 고도성장은 한국인들이 보다 현명했더라면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 정치가는 오만했으며, 경제학자들은 어리석었다. 그들은 고도성장기의 창의적인 정책체계와 행동원리를 낡은 것으로 매도하였다. 경제학자들의 책임은 더욱 크다. 그들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성장한 한국의 대기업과 대규모 기업집단에게 독과점의 폐해를 물었다. 그들의 시야는 좁은 국내시장의 지평에 닫혀 있었다. 그들은 1년 주기의 1국 단위로 생산된 계정을 근거로 정부와 대기업이 감행한 투자의 비효율성을 비판하였다. 그보다 더 지독한 공간의 착오, 곧 인식 상의 범주 오류를 찾기는 쉽지 않을 터이다.

한국경제를 선진화시키고 다수 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고도성장기의 지혜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 곧 대기업 주도의 세계경영이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는 전면 혁파되어야 하며, 그런 취지에서 공정거래위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법인세를 낮추고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 소득세는 국민개세의 원칙을 실현하는 전제 위에서 부유층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재산세는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금보다 그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촉진하는 것과 경제성과의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은 타협이 가능한 선택이다.

한국경제를 사회와 문화의 영역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파격적인 지원과 더불어 외국의 대기업은 적극 유치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국가경제의 자립도를 제고하는 전략적인 고려가 필수적이다. 외국인 취업과 각종 이민의 쿼

터를 그에 따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그것은 한국인의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영어의 공용화를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에 제안한 적이 있는 한일해저터널을 하루 빨리 개통해야 하며, 더불어 두 나라의 시장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노력을 차후 20년간 간단없이 이어간다면, 한국경제는 그의 유리한 비교지경학적 우위에 힘입어 동아시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 즈음 한국의 종업원 규모별 제조업체의 분포는 <자료16>과 같이 바뀌어져 있을 터이다. 변화의 핵심은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을 확충에 있다. 거기가 한국의 서민들이 안락할 자리이다.

【자료 16】 종업원 규모별 기업 분포에 있어서 진정한 서민경제의 길



토론 1

저성장의 원인과 대책

／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토론문①】

저성장의 원인과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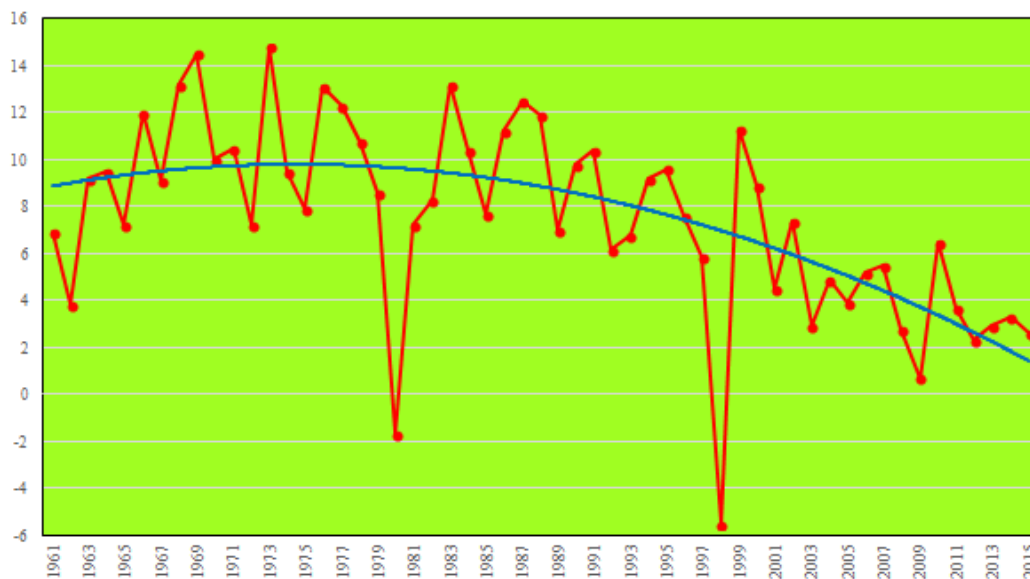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저성장의 원인과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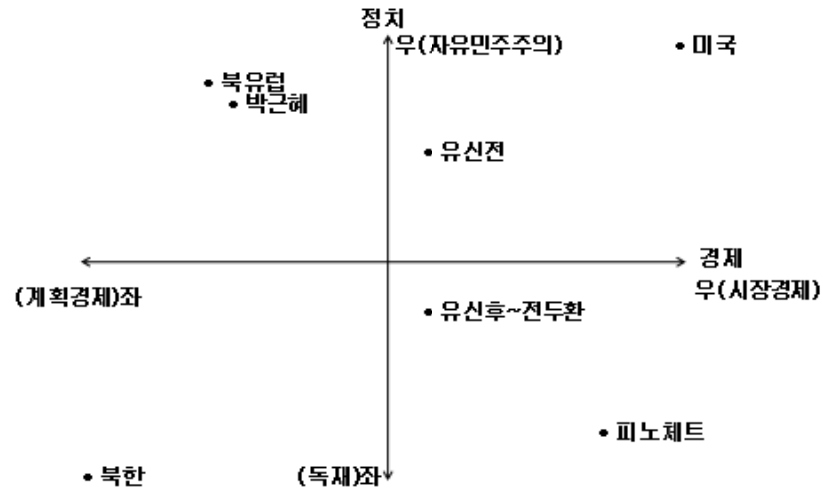
2017년 8월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실질국내총생산 (Real GDP) 연 증가율



정치·경제 2차원의 이념적 좌표



정치·경제 2차원의 이념적 좌표

- 우: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 좌: 개인보다 집단·국가를 우선시
- 개인의 자유·권리보다 정부·관 우위 지속
- 집단·국가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우파가 가장 혁신적이고 진보적
- 보수주의(conservatism): 미국의 건국초기부터 헌법 등에서 우선시되어온 개인의 자유·권리를 유지·보전
- 정치: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우, 독재(autocracy) 좌
- 경제: 시장경제(free market economy) 우, 계획경제(planned economy) 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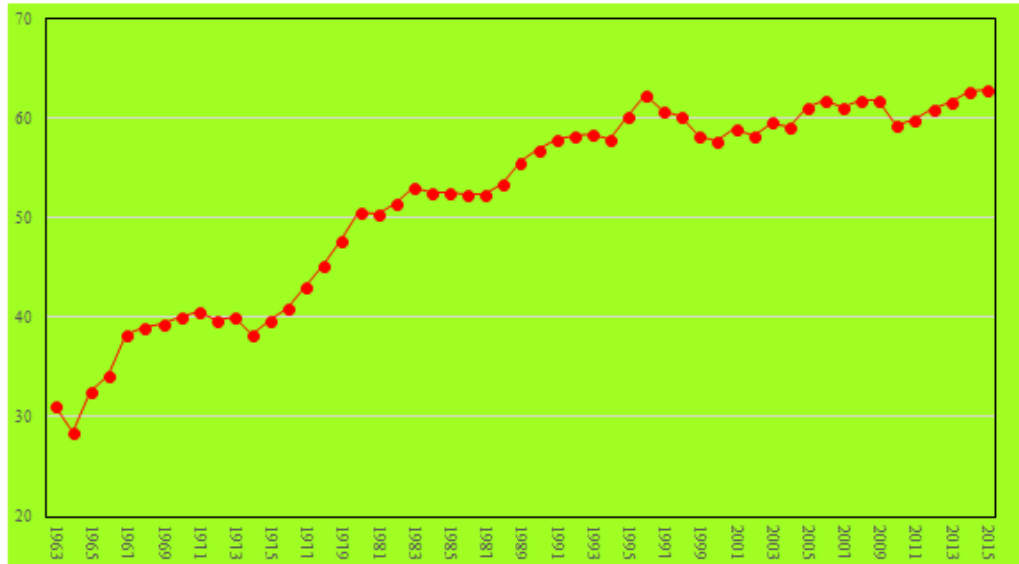
정치·경제 2차원의 이념적 좌표

- 골목상권보호, 동반성장, 중소기업적합업종 등의 경제민주화와 무상복지정책
- 경제차원의 “시장우파”는 극히 소수, 대부분의 우파는 정치차원의 “민주우파”
- 북한과 같은 독재(“반민주좌파”)에 반대하는 “민주우파” 이면서 시장보다는 정부의 각종 보조금이나 퍼주기식의 온정적 정책(paternalistic policies)에 기대는 “반시장좌파”
- 국가사회주의(nazism, national socialism), 군국주의(militarism): 전체주의(totalitarianism)로 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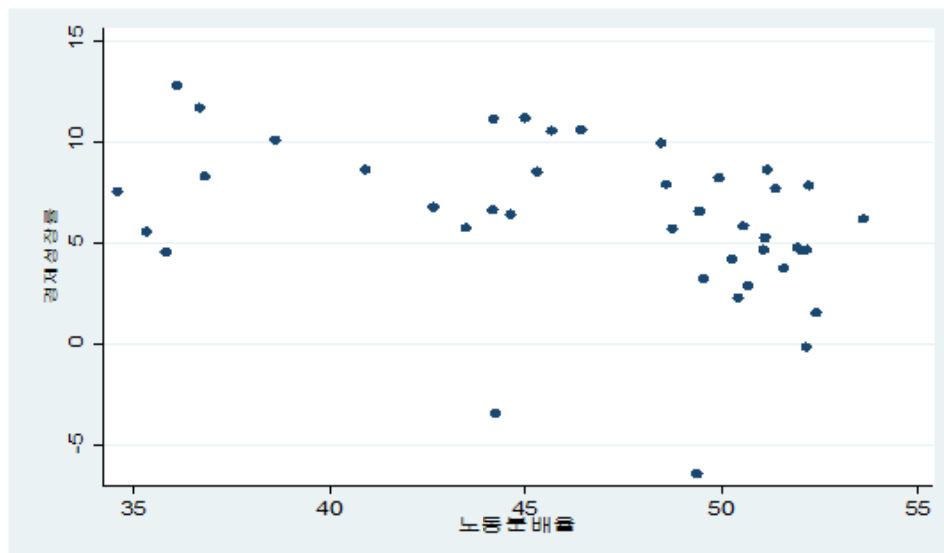
2014 GDP per head, constant prices, constant PPPs, 2010 US dollars

1	Luxembourg	84,826	18	Japan	34,905
2	Norway	59,951	19	Korea	33,657
3	Switzerland	52,388	20	New Zealand	33,177
4	United States	50,620	21	Italy	32,397
5	Ireland	46,855	22	Spain	31,181
6	Netherlands	44,603	23	Israel	30,698
7	Australia	44,114	24	Czech Republic	27,614
8	Sweden	42,806	25	Slovenia	27,384
9	Austria	42,765	26	Slovak Republic	26,483
10	Germany	42,454	27	Portugal	25,745
11	Canada	42,139	28	Estonia	25,269
12	Denmark	41,994	29	Greece	24,286
13	Iceland	40,954	30	Hungary	23,109
14	Belgium	39,619	31	Poland	23,038
15	United Kingdom	37,795	32	Chile	20,636
16	Finland	37,490	33	Turkey	18,173
17	France	36,373	34	Mexico	16,189
			35	China	12,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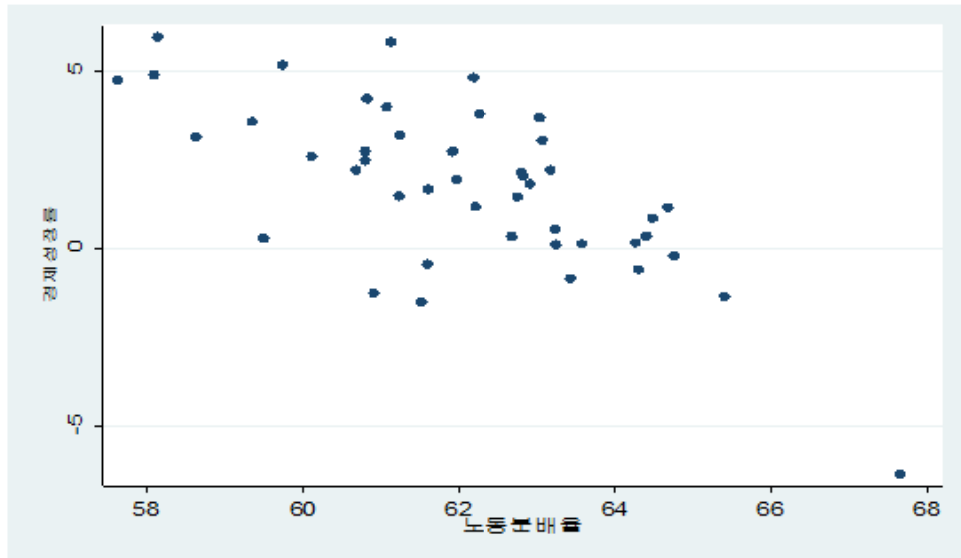
노동소득분배율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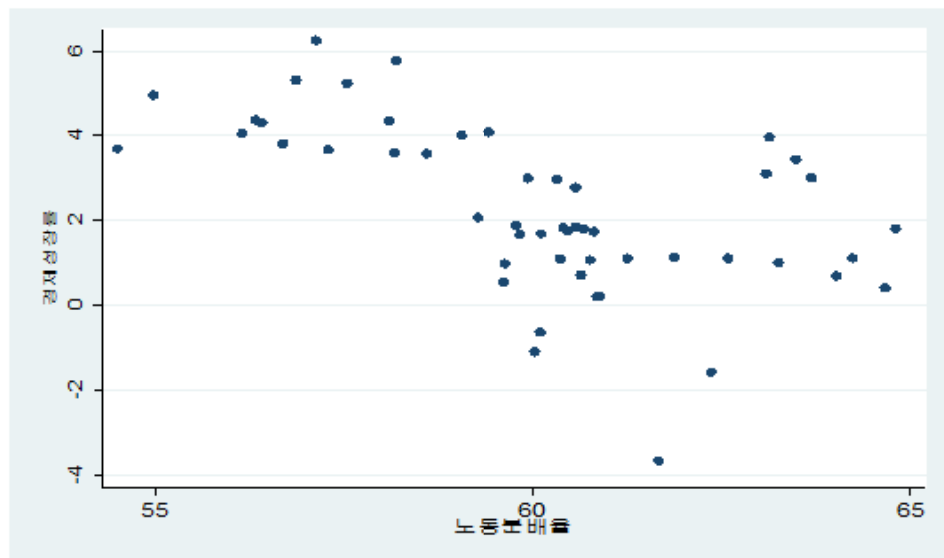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률 (한국 1971-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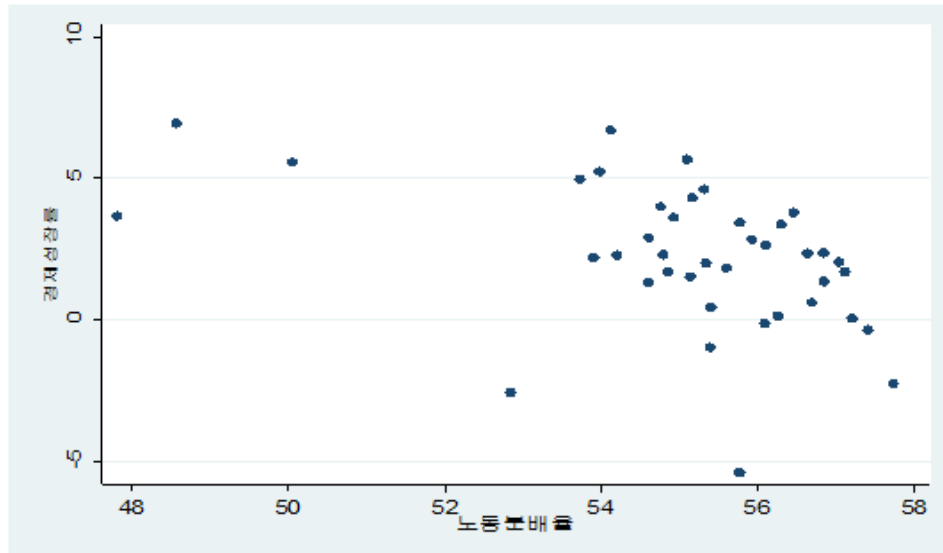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률 (덴마크 1967-2011)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률 (프랑스 1961-2011)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률 (일본 1971-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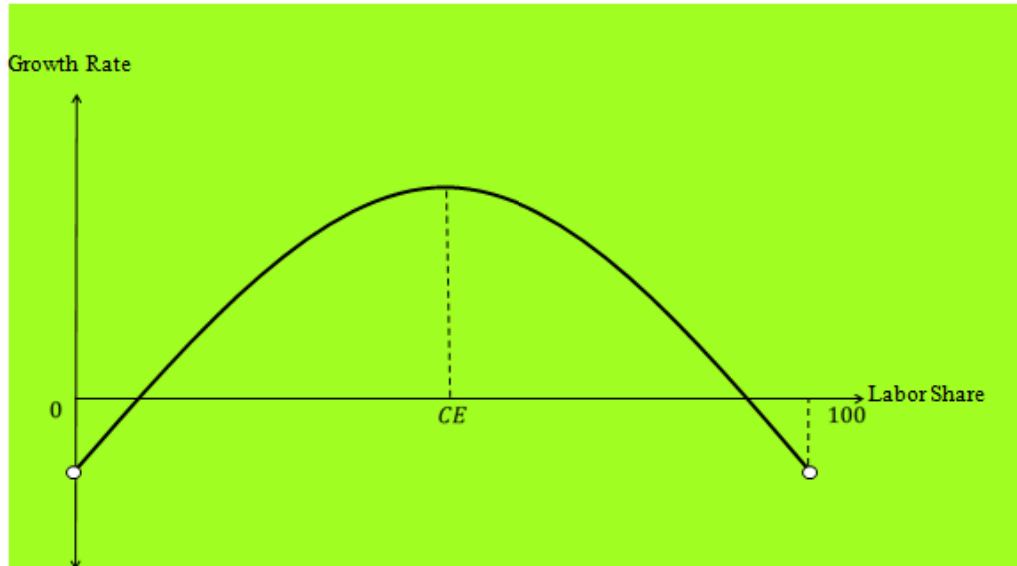
Growth Regression (32 OECD Countries, 1980-2010)

1

Variables	(1)	(2)	(3)
Log (Lagged Per Capita GDP)	-0.0865*** (0.0089)	-0.0792*** (0.0089)	-0.0775*** (0.0089)
Log (Fertility Rate)	-0.0439*** (0.0085)	-0.0388*** (0.0084)	-0.0425*** (0.0085)
(Life Expectancy at Birth) ⁻¹	-8.9324 (7.0944)	-10.9709 (7.0182)	-8.6215 (7.0252)
Investment Ratio	0.2659*** (0.0287)	0.2953*** (0.0291)	0.2978*** (0.0289)
Female School Years	0.0089** (0.0039)	0.0091** (0.0039)	0.0074* (0.0039)
Male School Years	-0.0095** (0.0038)	-0.0098*** (0.0037)	-0.0089** (0.0037)
Government Consumption Ratio	-0.3502*** (0.0056)	-0.1761*** (0.0067)	-0.1651** (0.0670)
Openness Ratio	0.0388*** (0.0062)	0.0333*** (0.0063)	0.0345*** (0.0063)
Inflation Rate	-0.0678*** (0.0139)	-0.0682*** (0.0137)	-0.0708*** (0.0137)
Labor Share	-	-0.1621*** (0.0360)	0.4592** (0.2114)
Labor share × Labor Share	-	-	-0.5818*** (0.1951)
R-Squared	0.6484	0.6578	0.6619
No. Countries	32	32	32
No. Observations	809	809	809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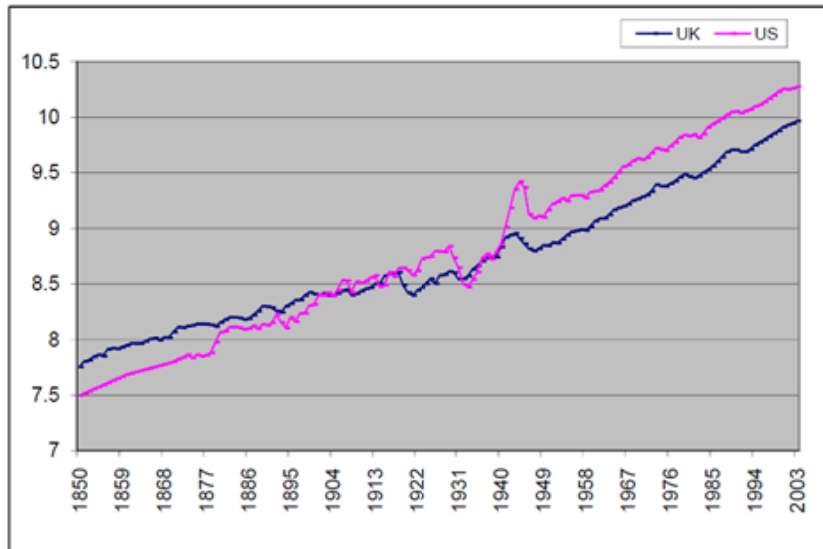
12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률

-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률: 역 U자형 관계
- 1987년 6·29선언 이후 노조활동 활성화 \Rightarrow 노동소득분배율 급증
- 노동소득분배율: 52.3%(1986년) \Rightarrow 62.4%(1996년)
- 경제성장률: 연 1.0%p 감소
-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 비정규직의 강압적 정규직화, 노조강화 \Rightarrow 노동소득분배율 제고 \Rightarrow 경제성장률 추가적 하락 예상

영국(UK)과 미국(US)의 로그 일인당 GDP (Ehrlich 2007)



영국과 미국, 일인당 GDP 역전의 원인

- 20세기 초 미국 1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을 받은 자가 영국의 두배 반으로 훨씬 많음 (Maddison 1991)
- ◀=>미국에서 고등교육으로 대표되는 창조적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19세기 후반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 ◀=>1862년과 1890년의 모릴 토지양여법(Morrill Land-Grant Acts) 등에 의해서 토지양여 대학들이 설립되어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 받음
- 모릴 토지양여법: 연방정부의 토지를 각주에 30,000에이커 (120km²)씩 양여하여 그 토지에 대학을 설립하거나 토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대학을 설립하도록 함
- Iowa State University를 시초로 70개의 대학이 설립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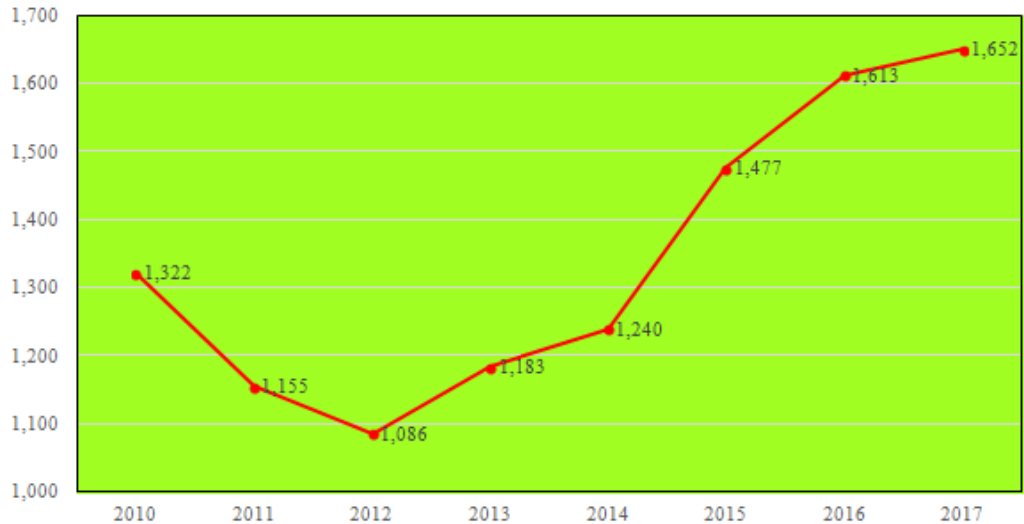
- 300만명: 대기업 정규직 136만명, 공무원 101만명, 중앙및 지방 공기업 정규직 34만명, 사립학교 교직원 28만명
- 노동개혁의 필요성: 300만명 vs. 1,600만명, 청년
- 노동개혁의 원칙: 공정성(fairness) \Rightarrow 임금 = 생산성
- 자유로운 구직·구인 \Rightarrow 임금 = 생산성: 노조의 방해
- 노조의 순기능: 집단적 의사소통
- 노조의 역기능: 과도한 힘의 발휘 (monopoly unionism)
- 노동개혁의 핵심: 노조의 제자리 찾기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원칙

-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구직·구인을 방해하는 것이 노동공급을 독점하는 노동조합(monopoly unionism, Lazear 1983):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조정으로 대응하고 싶지만 노조의 압력과 노동법에 의해 거의 불가능하므로 임금은 어쩔 수 없이 생산성을 초과하게 되어 자원배분의 공정성 및 효율성 훼손
- 노동부문의 가장 큰 암초가 과도한 힘을 발휘하는 노동조합
-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조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면서 과도한 힘의 발휘를 억제하여 노조가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

청년실업자+취업준비자+구직단념자(2월)

(단위: 천명)



1. 파업 중 대체근로 인정과 직장점거파업 금지

- 대체근로 금지 ⇒ 노조의 막강한 힘
- 사용자가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그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음
- 미국: 일시적으로 외부 인력으로 대체, 복귀를 거절하면 영구적으로 대체
- 프랑스: 무기계약근로자로 대체, 도급
- 독일: 신규채용, (하)도급으로 대체(파견근로자로 대체 금지)
- 일본: 신규채용, (하)도급, 파견근로자로 대체

1. 파업 중 대체근로 인정과 직장점거파업 금지

-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파업권)과 사용자의 영업권(경영권)을 대등하게 보장: 대체근로 인정
- 노사관계가 시장기제에 의해 견제·균형
-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 가능
- 대체근로가 가능하려면 직장점거파업 금지
- 파업=워크아웃(walk out): 파업 중인 근로자는 인원수와 장소의 제한을 받으면서 피켓을 들고 사업장 앞에서 시위
- 파업불참근로자나 대체근로자는 cross a picket line

2. 제조업무 등 파견근로 자유화

- 주유원, 주차장관리원 등 32개 업무 파견근로 허용: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 기업의 본질: 거래비용을 최소화 (Coase 1937)
- 제조업무의 파견과 사내도급은 보편적인 생산방식 (조영길 2015)
- 일본: 2003년 제조업무 파견허용 50만명 ⇒ 2013년 127만명
- 독일: 2003년 파견 자유화 32만명 ⇒ 2013년 81만명
- 영국의 노동개혁안: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 허용
- 한국: 2014년 13만명, 1997년(파견법 직전) 22만5천명보다 감소

3. 사무직 초과근로 면제

-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 통상임금의 50% 가산
- 미국: 초과근로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와 받을 수 있는 자
- 면제 근로자: (a) 연봉 \$47,476(주급 \$913) 이상, (b) 봉급 베이스 급여, (c) 경영·전문·관리적 직무 수행자
- 또는 연봉 \$134,004 이상 비육체적 근로자
- 관리·사무직 및 기타 직종 연봉 상위 25%의 근로자(남성일 2007)
- 평균연근로시간 2,110.8 \Rightarrow 1,972.8: 저녁이 있는 삶
- 시간급과 성과급으로 대별 \Rightarrow 통상임금의 논의 쉽게 합의 도달

4. 통상임금의 1개월 기준

- 대법원이 정기상여금 등의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결을 선고 함으로써 수많은 사업장이 노사 간의 통상임금 분쟁에 휩싸여 있음
-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일본에는 1개월 한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이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나온 판결
-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에 통상임금의 1개월 한도를 명시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같은 임금 항목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함

5. 중복할증 금지

- 최근에 하급심 법원들이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라고 판단하여 100(=50+50)% 할증된 급여를 지급하는 판결을 하고 있음
- 이것 역시 다른 국가에서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움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 할증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함
- 노동개혁은 통일 후 북한주민들이 복지 대상이 아닌 생산인력이 되기 위해서도 절실하기 때문에 통일 대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

6. Tripartite Commission: Corporatist Approach

- The labor reform through the tripartite commission: an embodiment of corporatism.
- Corporatism considers a society as a corpus
- The venue for the representatives together to decide whatever will be upon their agreement.
- “The Road to Serfdom” (Hayek 1944)
- The key success factor of the labor reform is to make labor unions the object of reform, not the principal of reform.
- They acted as if they were the main players to lead the reform in the commission.
- A series of ridiculous situations have occurred: Failure.

토론 2

약자를 어떻게 자조, 자강하게 할 것인가?

／
김 대 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토론문②】

약자를 어떻게 자조, 자강하게 할 것인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1. 기업체와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주요한 분석과 주장이 기업 또는 사업체 규모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발제자가 비판하는 ‘민주화시대 이래의 정부 정책’도 정책의 주요 기준이 기업 혹은 기업집단의 양적 규모(자산, 종사자 수 등)이다. 기업 규모를 근거로 한 규제(강화든 완화든) 시비 자체가 ‘정책적 적폐’이다.

“국제경쟁력을 구비한 대기업이 쇠퇴하고, 국제경쟁력을 결여한 영세 사업체가 무수히 족생하여 좁은 국내시장에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음이 오늘날 저성장 추세에 놓인 한국경제의 민낯이다”

“종사자 1~9명의 영세사업체에 속하는 근로자의 비중을 1인당 GDP를 기준으로 국제 비교하면 한국은 28.8%로서 7.0%의 미국, 11.6%의 독일 등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물론, OECD제국의 평균 15.9%보다 월등히 높다....이들 전통 서비스업은 고도성장기에 걸쳐 자본-임노동관계로 충분히 분해되지 않았으며....도시부에서 과밀하게 적체된 영세 자영업자는 상호간에 비생산적인 경쟁에 빠져 있으며, 그 결과 낮은 이익률, 높은 부채율, 낮은 생존율의 병폐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화시대 이래 정부의 정책은 사회·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독과점업체로 지정된 대기업 내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억압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가운데 국가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인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억압은 저성장의 장기추세와 그에 따른 각종 악성의 양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시종일관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지만 국제경쟁력을 결여한 영세사업체만 양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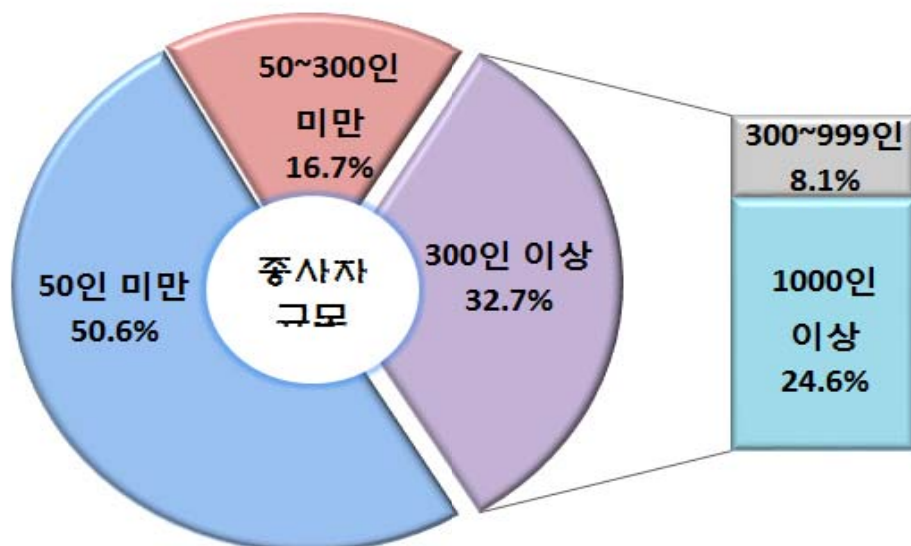
“전면적인 자유화와 개방을 통한 대기업 주도의 세계경영이야말로 국가경제를 선진화시키고 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진정한 서민경제의 길이다”

먼저 사업체와 기업체의 정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체는 “영리·비영리 또는 적법·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이다. 종사자 수는 “조사기준월(월력상)의 마지막 영업일 현재 고용형태,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당해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외국인 포함, 파견 용역 제외)”를 말한다.

‘2015년 기준 일자리행정통계’(2016.12.7)에 따르면, 총 일자리 개수는 23,195천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로는 총취업자 25,936천명. 임금근로자 19,230천명, 비임금 근로자 6,706천명(자영업자 5,563명, 무급가족종사자 1,144천명이다. 일자리 행정통계에서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소득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의 일자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임금 근로일자리 중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와 농림 어업의 생산 활동 경영인이 점유한 일자리도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의 문제를 대기업의 과소와 영세기업 및 자영업의 과다로 규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그 문제의식은 공감하지만, 주장의 근거는 대체로 ‘사업체’ 통계이다. 그런데 ‘2015년 기준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 일자리는 7,580천개로 전체의 32.7%, 1,000인 이상 기업은 24.6%다.

【그림 1】 2015년 기준 일자리행정통계



【표 1】 종사자규모별 일자리 규모 및 증감 (단위 : 천개, %)

종사자규모	일자리형태				소멸일자리	일자리 증감 (신규-소멸)
	계	지속일자리	대체일자리	신규일자리		
2015년 (구성비)	23,195 (100.0)	15,622 (100.0)	3,790 (100.0)	3,783 (100.0)	3,297 (100.0)	486 (100.0)
50인 미만	11,739 (50.6)	7,594 (48.6)	1,511 (39.9)	2,634 (69.6)	2,360 (71.6)	274 (56.6)
1~4인	5,347	3,998	222	1,127	1,105	22
5~9인	2,068	1,173	356	540	437	103
10~49인	4,325	2,423	933	968	818	150
50~300인 미만	3,875 (16.7)	2,345 (15.0)	878 (23.2)	652 (17.2)	563 (17.1)	89 (18.3)
50~99인	1,583	926	360	296	260	36
100~299인	2,292	1,419	518	356	303	52
300인 이상	7,580 (32.7)	5,682 (36.4)	1,400 (37.0)	497 (13.1)	375 (11.4)	122 (25.3)
300~999인	1,868	1,189	443	237	185	52
1,000인 이상	5,712	4,494	957	261	190	71

사업체 통계는 전국사업체조사(매년)에서 얻어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은 경제총조사로 대체(2016.12 발표))

“조사기준일(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387만5천개, 종사자수 20,791천명. 제외 대상은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

2.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격차

e-나라지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현황)에 따르면, 국제청법인세신고업체 중 제조업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올라와 있다. 대기업은 상시종업원 300인 이상인 업체고, 중소기업은 그 미만인데, 여기에는 1~4인, 5~9인, 100~299인 등 다양한 규모의 중소기업이 있다. 당연히 중소기업 내부 격차도 크다.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는 2004년 5.3%p, 2010년 3.1%p에 이르렀으나, 2015년 현재에 1.1%p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는 대기업의 영업부진으로 같아졌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2001년 65.9%에서 경향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현재 54.1%(2014년이 52.5%로 저점)에 이르렀다. 영업이익률 격차에 비해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영업이익률 차이(%p)	2.4	1.8	1.9	3.1	1.9	1.1	1.2	0	1.1
임금 격차	58.4	55.4	57.6	54.8	52.9	53.2	52.9	52.5	54.1
중소기업 R&D 비중(%)	26.6	28	29.1	26.2	25.8	25.8	23.2	22.5	23.9

자료: e-나라지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45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위상지표」(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재편 가공),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를 종합

산업 및 기업 간 임금 격차는 산업 및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의 생산성(숙련)과 교섭력(지대), 근속기간과 노동시간 등에 따른 격차가 중첩되어 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산업 및 기업의 생산성(능력)격차일 텐데 이 역시 순수한 생산성과 지대가 중첩되어 있다. 단적으로 “사업체노동력조사”(2016년 평균 총 종사자수 16,642,176명, 임금 통계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많아 사실상 무한경쟁을 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2016년 평균임금은 1,880,902원, 청소원과 경비원 등이 주로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은 2,076,877원이다. 월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6,330,072원)이며, 그 다음이 금융·보험업(5,712,172원)이다. 제조업만으로 보면 평균은 3,754,827원인데, 5~9인 사업체는 2,611,925원, 100~299인은 3,720,085원, 300인 이상은 5,802,683원이다.

노동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 혹은 생산성과 임금이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면 이렇게 격차가 클 리가 없다. 종사자 개인의 능력(숙련) 및 노력의 격차가 3배까지 차이가 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은 주로 국가독점 공기업이 주도하며, 많은 설비·장치와 토지가 필요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다. 금융보험업은 높은 진입장벽(참여자격)과 상품서비스, 행위, 가격 규제 등을 많이 받는 규제 산업이다. 물론 한국에서는 과잉보호(규제) 산업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가장 많은 사람이 종사하는 제조업(3,629,646명)의 임금도 평균 보다 높은 편인데, 이는 세계적인 고생산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16년 6월에 발표된 2014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제조업은 총 부가가치 30.15%를 생산하고, 취업자 비중은 16.2%(3,828.7천명)다. 서비스업은 총 부가가치의 59.6%를 생산하고 취업자 비중은 70.2%(16,537.7천명)다. 건설업은 부가가치는 5.0%, 취업자 비중은 6.7%(1,582천명) 농림어업은 부가가치는 2.3% 취업자 비중은 6.0%(1,417.9천명)이다.

【표 3】 2014년 산업연관표

	부가가치		취업자		비용자		취업자 1인당
	금액 (조원)	비중	숫자 (천명)	비중	숫자 (천명)	비중	부가가치 (만원)
농림어업	31.6	2.3%	1,417.9	6.0%	106.3	0.6%	2,229
광업	2.5	0.2%	14.4	0.1%	14.2	0.1%	17,361
제조업	408.5	30.1%	3,828.7	16.2%	3,326.7	19.9%	10,669
전력가스수도및 폐기물처리업	37.4	2.8%	187.3	0.8%	168.1	1.0%	19,968
건설업	67.3	5.0%	1,582.0	6.7%	1,146.1	6.9%	4,254
서비스업	807.6	59.6%	16,537.7	70.2%	11,947.0	71.5%	4,883
합계	1,354.9	100.0%	23,568.0	100.0%	16,708.4	100.0%	5,749

제조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10,669만원)은 서비스업의 그것(4,883만원)의 2.18배다. 하지만 OECD대부분의 국가는 고용이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물 흐르듯이 흐르기 때문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이 거의 비슷하다. 한국생산성 본부가 발표한 ‘2013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분석결과’에 따르면 PPP기준 주요 산업별 취업자1인당 노동생산성을 보면 제조업은 한국(110,083달러)이 미국(116,425)에 이어 2위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을 모조리 제쳤다. 하지만 취업자의 70% 내외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은 취업자1인당 생산성이 46,988달러로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비교 대상국 중에서 가장 낮다. 이는 한국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이 너무 적다고도 볼 수 있다. 그만큼 고용을 꺼리는 다양한 유인이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급상승시키면 결국 서비스업 쪽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는데, 문제는 여기에 묶여있는 고용이 생산성 높은 쪽으로 잘 옮겨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 제조업의 고생산성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LCD) 등 완성품(최종품) 제조 기업은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전력, 가스, 철도 등 에너지와 인프라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제약산업, IT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은 그렇지 않다. 한편 최종 소비재나 중간재를 생산하는 한국의 유력 대기업들은 국내 협력업체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시장 경쟁의 압력을 아래(협력업체)로, 소비자에게로 부담, 전가할 수가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제, 단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기업별 노조 체제 하에서는 기업 규모가 크면 노조의 교섭력이 커지고,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상승 폭도 커진다. 당연히 근속기간도 길어지게 되어 있다. 노동시간조차도 대기업이 길다.

한국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산업의 특성과 기업 능력)과 개인의 생산성(숙련)에 주로 기인한다. 산업 및 기업의 생산성은 기술력, 자금력, 마케팅력, 브랜드파워, 경영능력과 지대수취 능력의 총화이다. 지대는 국가독점, 국가규제(금융, 방송, 통신, 교육 등), 민간독과점(우월적 지위=공박한 처지)의 총화이다.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는 생산성 외에도 국가규제(진입장벽), 공무원과 공기업 등을 규율, 강제하는 고용임금 표준, 노동의 교섭력(노동지대), 근속기간(연공지대와 숙련)과 노동시간(초과근로시간과 할증율) 격차가 삼중, 사중으로 중첩되어 있다. 기업규모와 산업특성에 따른 임금 격차는 이 요인들을 축소, 제거해야 하는 엄청난게 지난한 작업이다.

3. 소득과 격차의 4요소

기업의 수익과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생산조직(부문, 산업, 기업 등)과 개인(노동)의 생산성 및 지대의 중첩으로, 소득의 성격을 4개로 대별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불평등, 양극화는 4중 중첩구조에서 연유한다. 해법도 노동과 집단의 생산성은 올리고, 지대는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성과 근로조건을 긴밀하게 연동시키는 것이다. 기업 규모는 거래 비용을 타산하여 선택하면 되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표 4】 소득과 격차의 4 요소

	생산성(정상 이득)	지대(초과 이득)
노동	개인의 숙련(기술), 태도, 직무, 학력, 성 등	기업의 숙련형성 전략, 임금사상(연공임금, 숙주주의 등), 노사(집단)역학, 기업별 노조의 단체교섭
기업·산업·직업 부문	산업·기업의 생산성(기술력, 경영능력 등)	국가표준, 국가규제, 진입장벽, 시장역학(소비자, 협력업체, 경쟁업체와 관계 등), 불법적 갑질

생산성은 기본적으로 투입 대비 산출이다. 투입 요소는 사람 숫자, 노동시간, 자본양 등이다. 산출 요소는 생산량이나 부가가치다. 투입 대비 산출은 노동의 숙련(기술), 열정(태도)과 기업의 기술력 및 경영능력, 국가규제와 시장구조 등이다. 자본생산성은 주로 부가가치÷자본양이며,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취업자수(취업자당 생산성) 혹은 부가가치÷총 노동시간(시간당 생산성)이다. 부가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이는 기업의 본원적인 경쟁력(생산성)과 시장구조, 국가규제 등에 의해 정해진다.

진짜 생산성(정상 이득)과 부풀려진 생산성(초과 이득)=지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혹은 소비자 선택권과 공급자간 경쟁을 왜곡하는 요인이 없는 이상적인 시장과 현실의 시장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동시에 이상적인 국가 규제 및 표준과 현실의 그것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한국의 소득 격차와 일자리 문제의 성격이 다른 나라와 확연히 다른 것은 첫째, 개인(노동)의 능력보다는 소속집단(기업)의 능력이 결정적인 변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임승차를 용인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 능력이라는 것도 진짜 생산성이 아니라 지대가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공공부문 등에 적용되는 국가표준은 이런 부조리를 완화하기는커녕 더 확대, 강화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 보다 소속집단의 능력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것은 기득권 노동보호에 치중한 노동관계법과 관련이 있다. 지대는 원래 국가규제와 독과점과 불법적 갑질의 산물이다. 그렇기에 소득 격차와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국가, 특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치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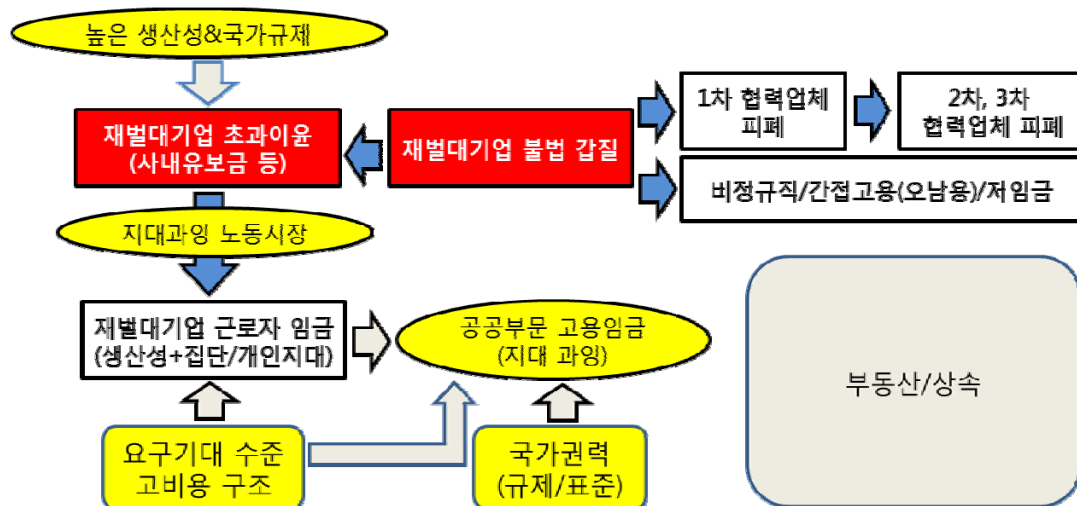
대기업은 우월한 기업 능력의 결과이다. 기업의 규모가 크면 무조건 능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좋기에 규모가 커진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에서는 항상 규모의 이익과 불이익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후자가 여간

커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는 다양한 가치생산사슬을 내재화하여, 기업 규모가 커질 때 비용과 위험이 여간 커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거의 모든 혜택과 부담(규제)가 기업(집단) 규모(종사자나 자산)를 기준으로 주어지기에 대기업 혹은 대기업집단이 되었을 때 떠안게 되는 의무, 부담이 너무 많다.

지대추구(쟁취=약탈주의)를 핵심 이념으로 한 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도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노동시장의 공정성, 연대성, 유연성이 극히 낮은 상황(직무성과에 따른 근로조건의 표준 부재 등), 즉 근로조건이 개인과 집단의 생산성의 함수가 아니라 기업별 노조의 쟁취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상식을 가진 경영자라면 내재화 비중과 직접 고용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마디로 기업의 다운사이징과 임금=비용 격차를 활용한 아웃 소싱도 지극히 합리적인 경영 전략이다.

한국기업이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 특히 대기업화를 꺼리는 것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바뀐 위험, 완충 시스템과 한국 특유의 고비용 구조를 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 기업 규모는 ‘거래비용’과 ‘투자위험과 이익 타산’에 따른 기업의 선택이다. 어떤 노력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기업규모’는 정책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정책의 대상은 생산성 및 지대와 관련된 요소들이다.

【그림 2】 진보·노동의 불평등 양극화 관련 착각



4. 위험 분산·완충 시스템

한국의 경제와 고용 문제를 진단할 때 아주 핵심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적하지 않는 요인이 있다. 바로 기업과 노동의 위험 분산·완충 시스템이다.

외환위기와 김대중의 4대개혁(기업, 금융, 노동, 공공)을 계기로 ‘주식회사 한국’ 시절에 기업-금융-정부-노동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위험 분산·완충(risk hedging) 시스템이 거칠게 붕괴되었다. 그런데 낡은 위험 분산·완충 시스템은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경제에 미친 충격에 비하면, 고용유연성을 조금 늘렸다는 고용 법규는 새발의 피라고 보아야 한다.

단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30대 재벌 중 16개가 파산하였다. 1997년 기준으로 29개였던 국내 은행은 대량 감원을 동반한 수차례 인수합병을 거쳐 현재 11개로 줄었다. 1945년 이전에 설립된 5개 은행(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중에서 간판을 그대로 유지하고 독자 생존하는 은행은 하나도 없다. ‘대마불사 신화’는 확실히 붕괴되었다. 한편 파산한 재벌대기업은 대체로 총수나 핵심 임원들이 회계조작, 배임, 횡령 등으로 거액의 추정금과 함께 형사 처벌을 받았다. 동시에 기업 대출 등에 대한 연대 보증으로 인해, 변칙적으로 빼돌려놓지 않은 재산은 대부분 잃어버렸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 기업은 금융과 부채로 인한 리스크를 훨씬 크게 느끼게 되었다. 2000년을 전후한 시기의 대우, 동아, 메디슨과 최근의 STX, 동부 등 주요 재벌 대기업의 파산 혹은 은행주도 구조조정 과정을 통하여, 한국 금융은 관의 보호, 간섭 아래 성장하여 덩치는 크되 머리는 나쁘고, 부모(관) 눈치나 보는 비만아나 다름없는 존재로 판명 되었다. 금융의 노하우와 행태가 저열하고 예측 불허면 기업들은 금융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나라에 비해, 현금 보유량을 더 늘리고, 부채 비율은 더 줄여야 한다.

한편 대략 2010년 까지는 중국은 거대한 기회 요인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거대한 위기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오래 전에 다 예상했던 일이다. 한국은 산업과 기술의 특성상 중국의 도전에 매우 취약하다. 우리의 10대 수출 품목이던 석유화학, 철강, 조선, LCD, 휴대폰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품목들은 대체로 생산설비나 (싸게 빨리 만드는) 생산기술이 경쟁력의 요체이기에 중국이 상대적으로 쉽게 추격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그 어떤 나라 보다 중국의 경제적 용비로 인해 위기(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한국 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규직 직고용에 따른 리스크가 훨씬 크다.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은 좋은 직장에서 한번 밀려나면 그걸로 끝이다. 다시는 그런 좋은 직장 들어갈 수가 없다. 당연히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결사 항전은 필연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고용 리스크, 즉 구조조정 리스크와 비용은 그 어떤 나라 보다 크다. 비교우위 산업이나 잘 나가는 기업은 고임금에다가 구조조정이 곤란한 직고용 부담을 최소화해야 마땅하다. 더 적극적으로 외주하청화(고용의 외부화와 아웃소싱 등)해야 한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국내외 아웃소싱, 자동화 투자를 통한 단순 노동력 축소(구축)은 세계 보편적 현상인데, 한국 기업들은 한국 특유의 위험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 공세적으로 행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한국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유달리 낮은 이유다. 정규제에 따르면 2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은 한국은 기업 수는 0.2%, 고용은 19.9%(전체 근로자 기준)다. 일본은 기업 수 0.6%, 고용은 25.8%, 독일은 기업 수 2.1%, 고용은 52.9%다. 반면에 한국의 9명 이하 영세업체는 기업 수 81.1%, 고용은 24.2%다. 일본과 독일의 고용 비중은 14%, 6.7%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 특유의 노동시장의 부조리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다.

즉 한국의 기업, 금융, 노동이 보이는 특이한 모습은 결국 위험 분산·완충 시스템의 문제이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센 중국 리스크, 고용 리스크, 금융 리스크, 법규제 리스크(정년 연장법, 청년고용할당제, 비정규직 규제, 노동시간 규제 등), 사법 리스크(통상임금, 휴일근로, 회계조작, 배임 등)로 인해, 훨씬 더 보수적으로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5. 재벌 대기업

한국 재벌 대기업의 문제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등 해외에서 돈 많이 벌어서는 간판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 돈도 잘 벌어들여오면서, 간판 기업에 기대어 연명하고, 더 나아가 시장생태계까지 교란하는 수많은 내수위주 계열사들에게 있다. 이들은 대체로 국내 독과점 사업자인데,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기에 갑질도 더 심하게 한다. 결정적으로 혁신적인 독립 중소·중견기업이 자라 올라오는 것을 방해한다.

한국 재벌 대기업의 주요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변화해왔다. 과잉중복투자, 문어발식 확장(경제력 집중), 황제경영, 일감 몰아주기, 변칙편법 상속, 재무통이 주도하는 지나친 보수적 경영 등. 그런데 지금의 핵심 문제는 삼성전자 등 몇몇

기업을 빼 놓고는 중국의 빠른 추격에 밀려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주도산업과 혁신적 중소·중견 기업이 별로 없기도 하고, 나오기도 힘들게 되어 있다. 단적으로 한국의 생산물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은 공히 소비자, 노동자, 약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온통 기득권 보호용 규제로 칭칭 감아 놓았다. 핵심 생산 요소인 돈과 인재에 대한 유인보상체계도 지극히 안정지향적이고 지대추구적이다. 고시공시 열풍은 그 기념비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드(CBInsights)가 지난해초 선정한 세계 100대 스타트업 국적(최근 1년간 투자받은 스타트업 중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의 국적)을 살펴보니, 미국 56, 중국 24, 영국 6, 독일 3, 기타 11 개였다. 한국은 한 곳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을 한국 시장에 적용시 규제 저촉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이 중 40.9%는 국내에서 창업이 불가능하였다. 예컨대 우버(UBER)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고, 에어비앤비는 숙박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30.4%는 조건부 창업은 가능했다. 국내법상 별 문제없이 창업 가능한 사업모델은 28.7%에 불과했다. (김수호 맥킨지코리아 파트너 발표 및 소개,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 (2017.7.13), 아산나눔재단과 구글캠퍼스 서울 주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성과 진보·노동은 유력재벌의 계열사들과 중소기업 재벌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간판 기업의 많은 이익(사내 유보금 등)과 연결하여, 국가규제(비정규직 규제, 해고 요건과 절차 강화 등)으로 재벌대기업 전체를 옥죄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1960~80년대 산업정책이 낳아 기른 몇 안 남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조차 죽여 버리거나, 별 볼일 없는 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려고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 공정거래와 시장·산업 생태계

발제자의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한국경제를 선진화시키고 다수 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고도성장기의 지혜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 곧 대기업 주도의 세계경영이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는 전면 혁파되어야 하며, 공정거래위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법인세를 낮추고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 소득세는 국민개세의 원칙을 실현하는 전제 위에서 부유층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재산세는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금보다 그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경제를 사회와 문화의 영역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파격적인 지원과 더불어 외국의 대기업은 적극 유치되어야 한다...외국인 취업과 각종 이민의 쿼터를 그에 따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한국의 시장·산업 생태계는 역사적, 구조적으로 균형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한국 특유의 지리, 인구 조건과 산업발전의 역사로 인해 유럽, 미국, 일본에 비해 수요나 공급이 독과점화 되어 있는 산업(업종)이 많다. 국가독점기업(공기업)도 많고 민간독과점 산업도 많고, 규제 산업과 면허 직업도 많다.

경제 주체간 힘의 불균형이 극심하다. 뿐만 아니라 경제 행위의 외부 효과도 크다. 바로 이 때문에 국가 규제가 많다. 건설(부동산), 농업, 금융, 교육, 방송, 통신,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시장참여자 자격, 팔 수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 각종 행위와 가격(요금) 등을 국가가 규제한다. 아니 규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 조건(부지 확보난)에 의해 유통 시장도 독과점화 된 곳도 많다.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기존 상권의 반발이 극심한 것은 유통의 특성상 대등하게 경쟁할 수가 없고, 또 패자부활전이 실제로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와 관료(규제, 예산, 정책, 공기업 등)가 자원 배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경제주체가 있는 분야, 즉 부동산, 공공부문, 독과점시장, 상층 노동시장, 농업, 의료, 통신, 금융 등에서는 예외없이 불로소득, 초과이윤, 초과임금, 지대추구 등이 만연한다.

한국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공히 거래당사자(갑-을, 공급자-소비자) 간 선택권 및 거부권의 비대칭성이 심하다. 대립하는 당사자(노-사) 간에는 무기의 비대칭성도 심하다. 이로 인해 이른바 갑질 등 불공정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 경제

력집중에 따라 시장 및 산업 생태계의 황폐화(독식, 갑질, 문어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도 심각하다. 여기서 촘촘하고 경직된 국가규제가 탄생한다.

공정거래 관련 규제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공정하고 엄격하고 세련되어야 한다. 시장질서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벌(대규모 기업집단)의 상호출자 관계,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에 대한 분석과 감시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백 개의 산업/업종/직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이다. 소비자와 공급자(기업) 관계, 공급자(갑)와 공급자(을) 관계, 국가규제, 예산, 공기업과 시장 및 산업의 내밀한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하나의 원청업체에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전속거래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 가능성이 커기에 공정위의 특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전속거래의 경우, 공정위는 원청업체에 대해 더 많은 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독과점산업과 규제산업에 의한 시장 왜곡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삼성 10개 더 전략도 필요하다. 하지만 특권, 특혜 몰아주기에 의한 삼성 10개 더 육성 전략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창업자의 2세, 3세, 4세에 의해 지배권이 상속된 삼성 등 재벌과 후진적 금융과 비대한 공공부문이, 지금은 작지만 미래의 삼성으로 될 수도 있는 수많은 중소 중견기업을 가로막고 있음을 직시하고, 기업생태계를 덮고 있는 썩은 널판지를 제거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억제,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중소기업의 자강이다.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더 많은 구매자, 더 좋은 거래처, 더 많은 미래가치를 보는 신용 공급자를 만나는 것이다.

한국 중소기업은 유럽, 북미, 일본, 중국과 달리 협소한 국내시장과 하나 내지 몇 개의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찾는 시민도, 중소 협력업체도 더 많은 거래처, 수요처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거래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70억 인류가 사는 세계로 뻗어가야 한다. 세계시장에서 수요처(거래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0억 인류와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유통, 마케팅, 금융, 컨설팅 등)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민간 종합상사를 육성해야 한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교민(유학생, 주재원, 교민 등)과 소통하면서 이들의 경험, 정보, 지식,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상사 조직이 필요하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동반성장도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것의 기본은 자위, 자조, 자립, 자강이다.

7. 약자를 어떻게 자조, 자강하게 할 것인가?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국가권력으로 강자를 어떻게 바르게(규제) 할 것인가가 아니라 약자를 어떻게 자조, 연대하게 할 것인가로!! 화재 사고가 많이 난다고 온통 국가 소방 인력과 장비를 강화하고, CCTV 많이 설치하고, 사고 낸 놈 엄히 처벌하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 인화 물질 등 화재 요인 자체를 없애고, 유사시 최대의 피해자인 민간의 노력으로 화재를 초동 진압하는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 자위, 자조와 공공의 지원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공정위 역량과 역할 강화는 필요하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재벌대기업의 협력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약탈을 근절해야 한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도 규제하고, 사익 편취도 엄단하고, 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질서 개혁 정책의 기본은 이해당사자인 협력업체와 소비자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협력업체와 소비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불리한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대항력)을 가지는 것이다. 다양한 기업 이해관계자들; 기관투자가, 소액주주, 사외이사, 감사, 회계법인, 채권금융기관 등의 견제, 감시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공정위, 금융위, 검찰, 근로감독기관 등 국가가 나서서 악의 원흉으로 지목된 존재(재벌대기업과 오너일가, 자본, 원청 등)를 촘촘하게 규제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기 전에, 약자와 이해관계자의 대항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돈은 없지만, 창의와 열정이 넘치는 벤처중소기업에게 희망과 도전의 사다리 역할을 할 금융과 자본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